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중 비즈니스 : 사드정국을 중심으로

김애정*

목 차

- I. 서론
- II. 한반도 안보정세
- III. 한국의 사드배치와 중국의 대응
- IV. 한중 비즈니스 협력 현황
- V. 결론

한글초록

이 글은 사드정국으로 야기된 한중양국의 경색국면이 그동안의 양국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북한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역내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로 대응하였다. 한국 내 사드배치 결정에 중국이 크게 반발하였고, 중국은 경제 보복조치로 대응했다. 이로써 한중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의 안보조치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경제 보복조치를 취한 첫 번째 사례로, 그동안 한중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은 양상이다. 중국은 자국의 목표실현을 위해 경제력을 가용할 수 있는 국가로 변했고, 향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식되면 중국은 한국에 또다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발 위협 해소는 단

* 명지전문대학 중국어비즈니스 전공 교수

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지만, 한반도 안보불안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주제어

한반도, 중국, 안보정세, 사드(THAAD), 비즈니스 협력

I. 서론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정식으로 수교한 이후 빠른 발전을 거듭했다. 한동안은 ‘밀월관계’라고 평가받을 만큼 양국의 협력은 매우 빠른 발전을 지속했었다. 1992년 수교 당시 양국의 수출입 교역액은 약 63억 불을 기록했으나, 2019년 말 약 2,845.4억 불을 기록함으로써 수교 이후 27년간 약 45배가 증가하는 등 교역 규모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다.

양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교류 규모에서도 전례 없이 빠르게 확대됐다.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류(韓流)와 한열(漢熱) 현상이 나타났고, 2018년 연인원 기준 약 947.1만 명(방중 한국인 약 419.3만 명, 방한 중국인 약 527.8만 명)의 인적교류를 기록했다(中國外交部 사이트).¹⁾ 양국은 또 190여 개의 자매도시를 매어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안보적 차원에서도 양국은 수교 이전 적대적 관계를 수교 이후 ‘선린우호관계,’ ‘협력적동반자관

1) 1992년 수교 당시 양국의 인적교류는 13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2배가 증가한 것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chn.mofa.go.kr/korean/as/chn/policy/relation/index.jsp>(검색일: 2013.07.30.).

계, '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全面合作夥伴關係)'를 거쳐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戰略合作夥伴關係)'로까지 격상시켜 실질적 관계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처럼, 한중 양국의 협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양국 간의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마늘분쟁과 같은 통상갈등, 동북공정 및 단오제 등 역사·문화적 교집합과 관련된 갈등,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 관련된 갈등, 북한/북핵 문제를 둘러싼 정치·안보적 차원의 갈등 등 양국은 갈등을 겪었거나,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잠재된 갈등요인들을 안고 있다.²⁾

양국 지도부들은 상당 기간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며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까지 치닫게 하지는 않았다. 즉 정치·안보적 차원의 갈등이 경제교류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문화적 갈등이 정치·안보적, 경제적 차원의 갈등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양국의 지도부들은 한 분야의 이슈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거나, 연계시키는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수습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은 대표적 사례이다. 물론 그동안도 갈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던 것은 아니지만, 한 분야의 갈등이 최소한 다른 분야의 이슈로 확산되거나 이슈 간 연계로 인해 양국관계가 완전히 경색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정국으로 야기된 양국의 경색국면은 그동안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안보차원의 이슈가 한중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에 매우 크게 영향을 주어 양국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되는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특히 한국의 안보조치에 대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경제 분야

2) 한중 양국의 현재적, 잠재적 갈등이슈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다음을 참조(정재호외, 2012).

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해 관계가 경색됐다는 점이 그동안과는 상이했다. 이 글은 이 점에 주목해서, 사드정국은 한반도 안보정세가 한중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계기였다는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제 한반도 안보이슈가 한중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 및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이 비단 경제적 요인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차원의 변수, 특히 안보변수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찰하여, 향후 한중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 지속을 위한 방안을 초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은 학술적, 정책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개괄한다. 특히 사드정국을 전후로 한 정세분석에 집중할 것이다. 3장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 고찰한다. 4장은 사드정국을 전후로 한 수출입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을 분석할 것이다. 5장에서는 2장과 3장, 4장의 분석을 정리하고 간략하게 한중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을 전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II. 한반도 안보정세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패권 경쟁이 이뤄지는 각축장이었다. 그런데 2008년을 전후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한반도에서의 미중 패권경쟁이 더욱 심화됐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이

쇠퇴하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상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중국이 자국의 발전에 자신감을 갖게 됐고,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³⁾

2010년을 전후로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이전과 다른 공세적·적극적 행태를 보였다. 해양영토분쟁에 대해 중국이 이전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대응했던 사례들은 중국의 대외행태가 공세적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들이다(Aekyung Kim · Jiyoung Kim, 2017: 1-11).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도 중국은 해양영토 분쟁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확대하는 시도를 지속했으나 물리력을 동원한 충돌은 자제했다. 중국은 오히려 1999년 아세안 국가들과 남중국해 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보장과 무력 불사용에 합의했고, 2002년에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 초안에 합의하는 등 유화적인 전략을 전개했다.

그런데 2011년 2월 중국 구축함의 필리핀 어선에 대한 사격사건, 5월 중순 중국 순찰함의 베트남 시추선박 충돌사건, 2012년 중국 정찰함과 필리핀 군함의 대치와 베트남 EEZ 내의 스카보러 암초(Scarborough Shoal) 점거, 2014년 5월 중국 해양 석유 981 시추선의 베트남 영해 진입으로 중-베트남 양국 어선의 해상충돌 사건, 2014년 영유권 분쟁 중인 피어리 크로스 암초(Fiery Cross Reef)에 인공섬 건설과 군사시설을 배치, 2010년과 2012년 센카쿠 열도(釣魚島, 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에 대응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주변 해양영토에

3) 2008~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중국이 대외적으로 점점 단호해지기 시작했고 대외정책 부문에서 그 행태와 접근법이 고집스러워졌다고 평가받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강대국이 되는 주요 발판지역이라고 여기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행태는 더욱 그렇다(Michael D. Swaine, 2016: 2).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중국의 외교적·행정적 조치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불사했다(Aekyung Kim·Jiyoung Kim, 2017: 2-3).

이뿐 아니라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중국이 강경하게 반응했던 부분들은 중국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공세적 모습이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구상을 제안과 추진, 중국 주도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체결 등은 중국이 지역질서 구축에 있어 주도권을 쥐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중국의 부상이 중국의 대외인식과 행태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중국은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미국도 지역질서 주도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아시아 지역질서의 주도권을 두고 미국이 견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컨대, 미국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에서 중국의 지분확대를 반대했고, 2011년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과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천명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베트남과 군사적 교류를 확대해 갔다(허재영, 2018: 41). AIIB가 세계은행과 ADB가 채택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호주, 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동맹국들에게 참여하지 말라는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IIB는 중국이 ‘규칙 제정자(Rule Maker)’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해서, 지역질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중국주도의 금융질서 재편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표명하며 한반도 지역의 최대 안보이슈인 북핵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 결국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고도화와 경량화를 달성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문제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이우탁, 2013: 13), 미중 간 경쟁 국면에서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카드도 쓰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복잡한 형국으로 치달았다. 그 선후가 어찌 됐든,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는 매우 불안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미중 양국의 패권경쟁과 함께 북한발 안보위협 또한 한반도 안보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북한발 안보위협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는 이듬해 북미간 제네바 합의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북미 간 대립 격화로 이어졌고, 2002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 선언,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 IAEA 사찰요원 강제추방, 북한의 NPT 탈퇴, 원자로 재가동으로 이어지면서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

2차 북핵 위기 발생 당시에는 1차 위기 때와는 다르게 중국이 6자 회담을 조직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재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비록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한 후에는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을 함께 진행하여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를 채택하면서 북

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에 합의해갔다.

〈표 1〉 북핵 및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일지

1989.9	프랑스 상업위성이 촬영한 영변핵시설 사진공개
1993.3	북한의 NPT 탈퇴선언, 1차 북핵 위기 발발
1994.10	북미간 제네바 합의문 서명으로 일단락
2002.10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 및 플루토늄 핵시설 동결해제, 제네바 합의 폐기로 2차 북핵 위기 발발
2003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발사(2, 3, 4, 10월) 6자회담 출범(∼2007, 6차 회담까지 개최)
2005	9·19 공동성명
2006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7.5) 1차 핵실험(10.9)
2007	단거리 미사일 발사(5, 6월) 2·13 합의 및 10·3 합의
2008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발사(3. 5월)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해체(6.27)
2009	광명성 2호 발사(4.5) 2차 핵실험(5.25) 단거리 미사일 발사(7.2; 7.4) 단거리 미사일 발사(10.12)
2010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건,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11.12)
2012	북미간 2·29 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4.13; 12.12)
2013	2차 핵실험(2.12) 3차 핵실험(3.9)
2015.12	SLBM 시험 발사
2016	4차 핵실험(1.6) 장거리 ‘광명성호’ 미사일 발사(2.7) 탄도 미사일 발사(3.17) SLBM 발사(4.23)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6.22) ‘노동’ 추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9.5) 5차 핵실험(9.9) ‘무수단’ 추정 중거리미사일 발사(10.15)

2017	평북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2.12)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3.6)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3.22)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4.5; 4.16)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4.29)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5.14)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5.21)
	선덕 일대에서 신형 지대공미사일 발사(5.27)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5.29)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7.4)
	무평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7.28)
	깃대령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8.26)
	순안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화성-12형’ 발사(8.29)
	6차 핵실험(9.3)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9.15)
	평성일대에서 장거리 칸도 미사일 발사(11.29)

자료: 이장원(2017) 〈표 1〉

대한민국 외교부,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 자료 참고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이후부터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보수정권 9년 동안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발전은 없다고 선언하며 대북 고립정책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경량화, 탄도미사일 발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은 지속됐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한 규탄과 제재가 반복됐으며, 북한은 이에 더욱 반발하는 악순환이 연속되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국면은 그 수위를 높여만 갔다. 한반도의 긴장수위가 높아지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사드배치를 수용함으로써 한국은 MD 도입국이라 자인한 셈이다(차창훈, 2017: 204).

III. 한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응

MB정부 초기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의 한국배치 문제가 처음 제기됐다(이장원, 2017: 66-67). 〈표 2〉에서 살펴보면, 한국은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국방부에서는 2013년 이미 내부적으로 사드배치를 고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까지 중국에게는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미국의 요청도, 미국과 협의도, 배치 결정도 없다’는 3NO를 주장했다(아시아경제, 2015. 03. 13).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사드배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었다고 사료된다.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김홍규, 2016: 66). 사드배치 목적에 대한 한중 양국정부의 인식이 상이했고,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표 2〉 사드배치 관련 일정

2013.6	힐러리의 사드 한국배치 가능성 언급
2013.10	한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장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사드배치 고려중임을 밝힘
2014.9	로버트 워크 사드포대 한국 배치 고려중, 한 정부와 협의 중임을 밝힘
2014.10	한 국방부 한미간 사드배치 협의 없었다고 밝힘
2015.2	한민구 사드 구매계획도 도입움직임도 없다고 주장
2015.3.11	사드 관련 3NO(요청, 협의, 결정)주장
2015.3.12	사드 배치를 위한 비공식 부지 조사를 진행
2015.4	미 국방장관 사드는 생산단계로 배치 논의는 부적절 표명
2015.10	록히드마틴사 한미 사드문제 비공식 논의 중임을 밝힘
2016.1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 신년담화에서 사드배치 검토 표명
2016.2	시진핑 사드배치 위험성을 강조하고 사드배치 반대 표명

	박근혜 사드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이라는 점 강조
2016.6	시진핑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의 우려 전달
2016.7	사드 1포대 한반도 성주 배치 발표
2016.9	한민국 사드 2포대 추가구매 의사 표명
2017.4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 반입
2017.9	사드 4기 추가배치

사드배치에 대해 계속 부인하던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대통령의 대국민 신년담화를 통해 사드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반복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가 사드배치 검토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인 2016년 2월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안보이익을 훼손…… 엄중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2016년 12월 방한한 천하이(陳海) 중국 외교부 부국장은 대기업 임원진들과의 회동에서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느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의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KBS 보도, 2017. 01. 06).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사드배치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해서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의 관련 국가들의 전략적 이익에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도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참조).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차관보 역시 “한국 측이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종합해 보면, 중국의 주장은 한국의 사드배치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시켜 동북아를 냉전구도로 회귀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MD체계로의 편입되어 중국의 핵억지 체계를 무력화해서 미중의 전략적 균형을 저해한다는 것이다(Tong Zhao, April 27, 2016).⁴⁾

공식적인 발언 외에도 중국학자들과 언론은 강한 압박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의 완종저(阮宗澤)는 한국 내 사드배치가 한반도를 협력에서 대항의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경고하며, 한국이 강대국들의 충돌에 개입된다면 미국은 사드를 이용해서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추구할 것이고, 한국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강대국이 겨냥하는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環球網, 2016. 08. 05). 즉 미중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드를 배치한 한국은 중국의 갈등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사드문제를 두고 중국 내 학자들 간에 진행한 대담에서도 “사드는 표면적으로는 북한 방어지만 중·러에 실질적인 위협이며 더 나아가 동북아의 균형을 타개한다. … 미국은 사드배치를 미국의 아시아 회귀로 간주하며 동북아에서의 이익을 지켜고 중국의 군사발전을 억제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사드배치는 중한관계를 후퇴시키고 양국관계에 손해를 입힌다, 중국은 한국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필요한 반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環球時報, 2016. 07. 08). 한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상 한국이 경제무역 방면에서 쓴맛을 보게 하는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環球時報, 2016. 08. 01).

사드배치 결정이 발표된 후에는 중국이 실제로 보복이라고 판단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2016년 8월 중국은 한국인들의 업무출장을 위해 필요한 상용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여행사에서 초청장 발급대행이 가능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상용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중국정부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받아야

4)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중 간 이해관계 충돌의 핵심에는 북한발 핵과 미사일 위협이 명분이지만, 역내 미중 패권경쟁이 중요한 요인이다(송세관, 2017: 105).

만 했다(연합뉴스, 2016. 08. 03). 10월에는 한국산 설탕에 조사를 착수하여 세이프가드를 발동시켰고, 11월에는 한국산 폴리아세틸 및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소재에 대한 반덤핑을 조사했고,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조치를 취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발표했는데 다양한 이유로 수입이 불허된 한국산 화장품은 11톤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연합뉴스, 2017. 01. 10).

2016년 11월에는 중국이 자국에 진출해 있는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소방, 위생 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당시 많은 언론은 성주의 롯데 골프장이 사드배치 부지로 결정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해석했다. 2017년 3월에는 중국 정부는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을 시행했고, ‘한국 단체관광 전면 금지령’을 발표해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⁵⁾ 2010년을 전후로 남·동중국해에서 핵심이익이 침범됐다고 판단되면 중국은 경제제재 조치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타국이 군사무기를 배치했다는 이유로 그 국가에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타이완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이기현, 2018: 48).

중국의 보복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원동욱, 2018: 1-3).⁶⁾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성주 기지에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

5) 2017년 한한령을 비롯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은 한류관련 수지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평가됐다. K팝 음원이나 영화·TV 프로그램 판권, 콘서트 수입등과 관련된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는 2015년 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6년에는 5억 32천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2017년에는 2억 8천만 달러로 감소했다.(디지털타임스, 2019. 03. 02)

6) 중국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사드 문제로 경색된 양국관계를 개선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 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2017년 7월 28일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4기 추가배치를 결정했다.

이처럼 북한발 위협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를 결정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2017년 10월 31일 한중 양국은 양국관계를 정상국면으로 내몰았던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양국이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한다”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연합뉴스, 2017.10.31).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배치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3NO 입장을 밝히고(매일경제, 2017. 11. 06),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의 이 세 가지 입장을 중시하고 한국이 실행에 옮겨서 한중관계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中國外交部, 2017. 10. 30). 이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방문을 진행하며 양국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국면으로 선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 위한 행보로 평가하며 ‘파빙지유(破冰之遊: 얼음을 깨는 행보)’라고 보도했다. (원동욱, 2017: 1; 정재홍 2018)

IV. 한중 비즈니스 협력 현황

한중 양국은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연루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비즈니스 분야의 협력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지면상 모든 분야를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주로 수출입 교역과 인적교류 분야에 집중해서 양국의 협력추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표 3>를 살펴보면, 총액기준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사드배치 공론화했던 해의 한중 양국의 수출입 교역액은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메르스 사태 때는 사드배치 때와 교역액 감소의 원인이 다르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과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2015년의 경우 어느 한 나라가 고의로 경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사드배치가 공론화 된 2016년과 사드가 실제로 배치된 2017년은 중국이 경제 제제조치를 취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표 3>의 무역수지 비중(a/b)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2000년대에 들어 대중국 무역흑자액은 한국 전체 무역흑자액을 크게 상회 했었는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감소했으며, 사드배치 공론화 이후인 2016년에는 크게 감소해 전체 무역수지 이하로 떨어졌다. 사드를 배치했던 2017년에는 대중국 무역수지 비중은 2016년에 비해 다소 향상됐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도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2017년은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했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사드 추가배치가 결정되면서 중국의 의도적인 보복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표 3〉 대중 수출입 교역 추이

(단위: 억불)

구분	'92	'08	'09	'12	'14	'15	'16	'17	'18	'19
수출	26.5	1,122	1,021	1,666	1,903	1,743	1,588	1,773	2,043	1,736
수입	37.2	739	536	876	1,004	1,014	957	1,029	1,088	1,109
수출입(A)	63.7	1,861	1,557	2,542	2,907	2,754	2,545	2,802	3,131	2,845
전체 수출입(B)	1,584	8,573	6,866	10,675	10,982	9,633	9,016	10,522	11,401	10,456
비중 (A/B)	4.0	21.7	22.7	23.8	26.5	28.6	28.2	26.6	27.5	27.2
대중무역 수지(a)	-10.7	383	485	790	899	729	631	744	955	627
전체무역 수지(b)	-51.4	-132.7	404.5	283	471	903	892	952	697	391
비중 (a/b)			120	279	190	80.7	70.7	78.2	137	161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표 4〉의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사드배치와 양국의 인적교류 증감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한국 방문 중국인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메르스 사태가 발발했던 2015년에도 감소율은 미미했지만,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금지했던 2017년의 방한 중국인은 수치는 거의 절반인 48.3%가 감소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2017년 방한 중국인 수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2015년보다도 더 감소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전체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했다. 심지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에도 그 비중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중국정부가 단체관광 금지령을 발표한 2017년에는 무려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한국 방문 중국인의 감소는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도적인 보복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⁷⁾

〈표 4〉 한중 인적교류

(단위: 만 명)

구분	방중 한국인**	방한 중국인 (성장률)	양국 인적교류 (성장률)	방한 외국인 (비중)**
'08	396.0	116.8(9.3%)	512.8(-12.3)	689.1(16.9%)
'09	319.8	134.2(14.9%)	454.0(-11.5%)	781.8(17.2%)
'10	407.6	187.5(39.7%)	595.1(1.7%)	879.8(21.3%)
'11	418.5	222.0(18.4%)	640.5(7.6%)	979.5(22.7%)
'12	407.0	283.7(27.8%)	690(7.7%)	1,114.0(25.5%)
'13	396.9	432.7(52.5%)	829.6(20.2%)	1,217.6(35.5%)
'14	418.2	612.7(41.6%)	1,030.9(24.3%)	1,420.2(43.1%)
'15	444.4	598.4(-2.3%)	1,043(1.2%)	1,321.2(45.2%)
'16	476.2	806.8(34.8%)	1,283.0(23.0%)	1,724.2(46.8%)
'17	385.5	416.9(-48.3%)	802.4(-37.5%)	1,333.6(31.3%)
'18	419.3***	478.9(14.9%)***	898.2(11.9)	1,534.7(31.2%)
'19****		551.4		1,604.6(34.4%)

* 홍콩, 대만 마카오 제외; ** 방한 중국인 비중

*** 중국외교부 사이트에 명시된 방한 중국인 527.8만 명; **** 1~11월 누계

자료: 한국관광공사, 中國外交部

방한 중국인의 감소는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 경제와 한중 비즈니스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국의 보복 조치로 한국경제가 입을 피해는 다양하게 전망됐다.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관련 기관들은 예상 피해 규모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았다. IBK 경제연구소가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받을 수 있는 피해 규모에 대해 예상했던 바에 따르면 9조 원에서 최대 17조 원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IBK가 전망한 9조 원에서 최대 17조 원의 피해는 수출, 관광, 콘텐츠 산업의 직접 피해 규모에 해당되는

-
- 7) 한중 양국은 해상 신뢰구축과 각종 해상 사고 및 해양 안전에 대비하는 해경/해군 회의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2016년 한국의 사드배치 발표이후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뿐 아니라 군사교류 및 협력도 전면 중단됐다. (김태호, 2017: 76)

것이다. 해당 피해로 인한 고용효과, 신규투자, 연관 산업 부가가치의 감소까지 고려한다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면세점의 경우 전체 매출의 70% 전후를 외국인들 통해 올리는데 이들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중국 관광객의 감소는 한국 관광산업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프레스리안, 2017. 03. 08). 중국정부가 단체관광 금지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난 후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감소로 한국의 2017년 국내총생산(GDP) 약 5조원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도됐다(연합뉴스, 2018. 03. 14).

한국의 사드배치에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도 확산됐다고 보여진다. <환구시보>의 조사에 의하면, ‘사드를 배치하는 한국을 제재해야 하느냐’란 질문에 88.3%가 찬성했다. <신경보>의 유사한 조사에서도 87%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한국의 사드배치는 중국인들의 반한감정이 키웠다고 판단된다. 물론 중국인들의 반한감정은 중국 관방언론들의 사드비판 보도로 부추겨졌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2017년 10월 한국 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10대 도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사드갈등이 한국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83%가 긍정했다(이민자, 2017: 63). 중국인들의 반한감정은 한국 제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중국관광객 수의 감소와 한국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면세점 및 국내 유통업체, 중국 내 한국기업의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

8) 2017년 3월을 기점으로 중국 내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분위기가 확산됐고, 중국의 일부 소비자들은 반한 정서로 한국 자동차 판매가 감소했다. 2017년 1~4월까지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중국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했다. (연합뉴스, 2017. 05. 04)

V. 결론

이상으로 사드배치와 관련된 한반도 정세와 한중 비즈니스 협력현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실제로 아시아에서의 미중의 패권경쟁과 북한발 안보위협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악화시켰다. 한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하게 된 명분은 북한발 한반도 안보불안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한국의 보수정권 9년 동안의 대북 압박정책 그리고 중국의 비적극적인 대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촉구한 셈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는 한미 간 사드배치 합의로 이어졌고, 중국은 한국 내 사드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이 가진 카드로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한 것이다.

사드배치를 전후로 한국에 취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한중 비즈니스 협력을 전례 없는 경색 국면으로 치닫게 했다.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비즈니스 협력의 경색은 전통안보 이슈가 한중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금번 사드배치와 중국 보복 사례는 한중관계에서 안보이슈가 경제이슈와 연계되는 이정표가 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와 관련된 한중관계의 경색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요인,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자연 재해급 전염병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양국의 협력 감소가 아닌 의도적 보복조치가 취해져 야기된 협력의 감소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자국의 목표를 위해 경제력을 가용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했다는 점을 대내외에 보여주었다(이동민, 2017: 115). 이는 향후에도 중국이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국에게 또다시 경제 보복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의 일부로 활용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내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발 위협 해소 및 역내 패권 경쟁자에 대한 견제 등 다중적 포석이 깔려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 역시 미국과 직접 충돌하기보다 사드배치를 수용한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해서 자국의 의도를 표명하고자 했다.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이 가중될수록 한국은 미국과 중국, 북한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을 체감한 셈이다. 북한발 위협의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안보정세 불안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욱 절실하다.

참고문헌

- 정재호 외, 2012, 『중국을 고민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김태호, 2017, 「한·중관계의 악화와 사드의 교훈」, 『新亞細亞』, 24권 4호, pp.70-95.
- 김흥규, 2016, 「북한의 제4차 핵·미사일 실험과 한·중 관계」, 『성균차이나브리프』, 4권 2호, pp.66-71.
- 송세관, 2017, 「THAAD 배치와 한중관계 발전 방향」, 『전략연구』, 24권 2호, pp.87-114.
- 원동욱, 2018,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중관계 발전방안」, 『JPI Peace Net』, 2호, pp.1-3.
- 이기현, 2018, 「중국의 한국 사드(THADD)배치에 대한 인식과 대응-전략적 불편과 희망적 사고」, 『국제관계연구』, 23권 2호, pp.41-65.
- 이동민, 2017, 「사드배치 갈등봉합 이후의 한중관계: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모색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8권 4호, pp.97-120.
- 이민자, 2017,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중관계」, 『新亞細亞』, 24권 4호, pp.44-69.
- 이우탁, 2013, 「미국: '전략적인내' 사실상 실패, '북한방치' 벗어나야」, 『통일한국』, 5월, pp.12-13.
- 이장원, 2017, 「시진핑 시대의 한중관계: 사드 위기의 본질과 과제」, 『현대중국연구』, 19권 3호, pp.45-85.
- 王逸舟, 2011, 『创造性介入: 中国外交新取向』,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李敦球, 「中國周邊安全面臨五大挑戰」, 『中國青年報』, 2016. 04. 18.
- 李天陽 曲翔宇 劉洋, 「薩德」落戶攪動東北亞 中國專家: 韓國虧大了」, 『環球時報』, 2016. 07. 08.
- Shambaugh, David(ed), 2005,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im, Aekyung · Jiyoung Kim, 2017, "China's aggressive 'periphery diplomacy' and

- South Korean perspectives,” *The Pacific Review*, 12 November.
- Swaine, Michael D., 2016, “Chinese Views on Global Governance Since 2008-9: Not Much New,”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9.
- 「강경화 외교 “3No 원칙, 청와대 NCS서 논의” ... 외통위서 밝혀」, 『매일경제』, 2017. 11. 06.
- 「게임·K팝 문화콘텐츠 영향력 커져... 작년 한류 흑자 역대 최대」, 『디지털타임스』, 2019. 03. 02.
- 「사드 갈등 속 중국, 한국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 『연합뉴스』, 2017. 01. 10.
- 「사드보복 1년... 유커, 올 봄에는 돌아올까」, 『연합뉴스』, 2017. 03. 14.
- 이대희, 「IBK, 中 사드보복 피해규모 최대 17조원 전망」, 『프레시안』, 2017. 03. 08.
- 「전문화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연합뉴스』, 2017. 10. 31.
- 정재홍, 「2018년 중국 정세와 한중관계 평가 및 2019년 전망」, 서울평양뉴스, 2018. 12. 13,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0> (검색일: 2019. 04. 23.).
- 「中, 롯데에 고강도 세무·소방안전 조사 ... 사드 보복·표적수사 가능성」, 『아시아경제』, 2016. 12. 01.
- 「中, 외교 결례 거든.. “계산된 압박 전술」, KBS 보도, 2017. 01. 06.
- 「“중국, 한국인 상용비자 요건 강화” ... 사드여파?」, 『연합뉴스』, 2016. 08. 03.
- 「청와대 “미국 사드 미사일 한반도 배치? 정부 입장은 3NO”」, 『아시아경제』, 2015. 03. 13.
- 「현대기아차 4월 중국 판매대수 1/3토막... ‘사드 보복’ 여파」, 『연합뉴스』, 2017. 05. 04.
- 한국관광공사 통계자료 사이트, <http://kto.visitkorea.or.kr/kor/ktom/stat/stat.kto> (검색일: 2020.01.04.).
- 「因为“萨德”，中国应如何“报复”韩国」, 『环球时报』, 2016. 8. 1,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mJWNlp> (검색일: 2018.04.20.).

駐中韓國大使館, <http://chn.mofa.go.kr/korean/as/chn/policy/relation/index.jsp>
(검색일: 2013.07.30.).

中國外交部, 「2017年10月30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2017. 10.
30.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505857.shtml
(검색일: 2019.11.30.).

「中國專家警告韓國:韓若部署薩德, 將成其他大國對抗日標」, 『环球时报』, 2016.
8. 5, <https://oversea.huanqiu.com/article/9CaKmJWtug>(검색일: 2018.04.22.).
Zhao, Tong, “Why China Should Have Dialogue with the U.S. and South Korea
on THAAD,” South China Morning Post, Op-Ed. April 27, 2016,
[http://carnegietsinghua.org/2016/04/27/why-china-shouldhave-dialogues-with-](http://carnegietsinghua.org/2016/04/27/why-china-shouldhave-dialogues-with-u,s,-and-south-korea-on-thaad-pub-63459)
[u,s,-and-south-korea-on-thaad-pub-63459](http://carnegietsinghua.org/2016/04/27/why-china-shouldhave-dialogues-with-u,s,-and-south-korea-on-thaad-pub-63459)(검색일: 2018.04.20.).

The Security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China: Focused on THAAD Situation

Kim Ae Kyung(Professor, Chinese Business Major,
Myongji College)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fact that the change for the worse between Korean and China caused by THAAD differed from the bilateral relations so far. As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ncreased security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in the region escalated, South Korea and the US responded with a THAAD deployment. China has strongly opposed the decision to deploy THAAD in Korea, China responded with economic retaliation. This is the first time China has intentionally taken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s security measures,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s intentional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s security measures, it has not been se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China. China has turned into a country that can use its economic power to realize its goals, it is highly likely that China will take economic retaliation measures again in Korea. While the resolution of the threat from North Korea will not be re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is urgent to find ways to prevent the security anxiety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increasing.

Key Words

Korean Peninsula, China, Security Situation, THAAD, Business Cooperation